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성공적인 항쟁, 미완의 혁명

- 4.19의 이해와 평가 -

임 현 영

(회원, 민족문제연구소장)

이승만 독재체제를 타도한 1960년 4월혁명은 이듬해인 1961년 5.16쿠데타로 민족·민주·민중적 갈등과 모순을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는 관점에서 “4.19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의 실현을 위한 미완의 민중혁명이었으며 민중 자신이 아닌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박현채, <4월 민주혁명과 민족사의 방향>)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역사학적으로 아직도 정당한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한 이 미완의 혁명을 객관적으로 이해,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4월혁명은 그해 2.28 경북고 시위부터 3.15 마산봉기를 거쳐 이승만 하야(4.26)까지의 기간 중 총 187명의 사망자를 내고 한 정권을 무너뜨린 지극히 황홀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8.15 직후의 각종 민족운동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처절하고 엄청난 희생자 숫자와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적이란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서 4월혁명이 성공했을까에 대한 보다 냉철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절실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발포하여 사상자를 속출시켰으나 계엄군은 정권과 국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 발포하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글들이 많은데, 글썸 과연 당시 계엄군 사령관(전적으로 사령관 개인의 공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령관이 왜 이듬해 5.16이 발생하자 잽싸게 지지발언을 했을까?)이나 지휘관들이 그런 가치관을 지녔던가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군부가 경찰보다 더 관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없이는 4월혁명이 왜 성공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해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로부터 만 20년 뒤인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추가해서 함께 고찰한다면, 1960년대 군부는 오히려 6.25 직접 체험 세대

인데다 북한의 존재가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서 1980년대의 군부보다 더 관대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해답은 한국 내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가장 깊었던 미국의 대한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이 도출될 수도 있다.

분단 고착화의 절실성으로 미국이 선택했던 이승만 정권이 세계사적인 민족해방 투쟁과 민주화운동의 고조로 그 지속 효과가 사라져갈 무렵이었던 1960년대 전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일본과 분담하려는 미국의 안보정책 기조로 볼 때 비록 친미정권이라도 새로운 대안 정권이 절실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삼성, 《미국의 대한 정책과 한국 민족주의》, 한길사, 1993, 제1부 제2장, 제3부 제 1.2장을 참고할 것).

물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승만 하야를 비롯한 4월혁명의 성공 변수가 전적으로 미국 의존이란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족 주체적인 민주주의, 통일운동의 이념적인 향방 설정이 얼마나 복잡 미묘한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에서 이다. 4월혁명이 단순한 이승만 정권의 타도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반외세)·민주(반독재)·통일(반분단)운동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5.16은 엄청난 시련이었는데, 아직도 박정희 군부쿠데타와 4월혁명에 대한 연관성 및 여기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정답이 없는 실정이라 바람직한 통일운동의 좌표도 설정이 어려운 지경이다.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권을 수립, 정착시키려는 숭고한 이념성에 입각해 있지 않았음이 명백할진데 이에 대한 연구 없이는 4월혁명에 대한 평가는 껌데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1960년 서울의 봄이나 80년 서울의 봄은 같은 맥락이었고, 5.16과 5.17 역시 20년이란 세월의 차이뿐 똑같은 국민 절대 다수의 소망을 짓밟은 민족사적인 비극이었음을 상기할 때 대체 이 두 격변기 사이에 끼었던 과도정권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해명은 너무나도 절실하다.

어떤 혁명도 그 주체 세력과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평가받게 마련인데, 4월혁명은 흔히 학생주도의 반독재 투쟁이란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오히려 진정한 4.19의 민족사적인 의미를 탈색시키기도 한다. 4월혁명의 이념적 뿌리는 8.15직후 성행했던 민족 주체적인 민주주의 통일정부 수립의 이상에 있었던 것으로, 그 꿈이 친일, 매관자본, 친미정권에 의하여 좌절당한 뒤 6.25로 더욱 악화된 상황이 낳은 진통의 결실이었다. 외형적으로는 이승만 독재타도였으나 내면적으로는 반제·민족주체적인 민주주의와 통일의 성취라는 현대 민족사의 과제를 향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었다. 혁명을 평가할 때 실증주의에만 의존하여 당시 항쟁 세력들이 내세웠던 구호나

선전 전단에만 의존하여 그 이념성을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피상적인 관찰에 그칠 여지가 있는데, 4월혁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구호가 독재타도였기에 여기에 국한하여 평가하는 방법론이 바로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위한 학생·시민투쟁이란 입장이었다. 학술적으로는 근대화론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방법론에 따르면 4월혁명은 민족사상 성공한 첫 부르주아혁명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대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단독정부 수립과 6.25를 거쳐 분단 고착화 과정에서 한국 내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지식인과 민족 주체적인 운동세력은 면면히 그 이념적인 공고성을 다져 이어와 1950년대의 이승만 독재정권이 노정했던 여러 모순에 직간접적으로 도전했으며, 특히 대학생을 중심한 여러 서클 중심의 활동들은 당시 여야를 통틀어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의식의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4월혁명 추동 세력이었던 4월혁명 동지회를 비롯한 그 동조세력들이 지녔던 이념적 지향성은 자유당 일당독재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민주당 집권 대안이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는 분명히 극복한 민족·민주·통일에 대한 운동성을 지녔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제2공화국 시기에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후 5.16군부독재 정권 아래서도 그 흐름은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4월혁명은 성공했는가? 그렇다고 보는 것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부르주아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8.15 이후 좌절당한 민족·민주·통일운동의 이념적 구현으로 4월혁명을 본다면 미완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 1961년 쿠데타 이후 4월혁명 이념은 잠깐 군부독재 세력에 의하여 도용당해 마치 쿠데타가 혁명이념의 대안인 양 오도되기도 했지만 이내 목살당한 채 민주화 운동세력에 의해서만 강조되어 왔다. 그 뒤 어떤 집권세력도 4월혁명의 이념에 부응하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권 초기의 국민적인 기대와는 달리 개혁의 시련에 봉착해 버린 국민의 정부조차도 4.19 직후 민주당이 겪었던 미성숙을 연상시킨다.

4월혁명 4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4월의 역사적인 평가와 그 이념적 위상을 만족스럽게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차라리 ‘혁명’이란 말 대신 4월 ‘항쟁’으로 개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 현대사에서 단 하나 성공한 혁명이라는 월계관을 썼던 4.19로부터 이제는 그 월계관을 빼앗아야 할 계제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연세대학원신문》 제106호(2001.6)